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2/ 23 통권 1498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번 만큼 세금낸다'는 의식 몸에 배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공표내용(2018년 기준)과, 근로  
자 1인당 평균연봉 추정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  
탈범 명단 공개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코로나19에 따라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일괄조건  
으로 지원하는 임대료지원금은 손금인정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 개인명의 주택구입과 법인명의 주택구입의 규제강화 각종 불이익 비교 >

개념, 구분	개인명의 구입	법인명의 구입
취득단계 (취득세 등)	1주택(6억까지 1%, 6~9억 2% 내외, 9억초과 3% 등) 2주택 : 8% 3주택 : 12%	12%(2020년 8월 12일부터) (사원용 주택은 1~3% 적용)
보유	재산세 (지방세)	주택종합합산일반세율 (6천만원 이하 0.1%, 0.15%, 0.25%, 3억초과 0.4%)
	기본 공제	1세대1주택 : 9억, 공동소유 구 분명의자별 각 6억
	종합부동 산세	누진 세율
	세액 공제	9억공제인 경우 장기보유공제 와 고령자공제 적용
처분	양도차액의 적용 세율(일반세율+ 중과세율)	일반세율(6%~42%)+10%(2 주택) 또는 20%(3주택부터) 2년미만 보유 40%, 1년미만 보 유 50% 단일세율
		· 일반세율(2억 초과 20%)+주 택추가세율 20%(2020년까지 는 10%) · 비사업용토지(일반세율 20%)+ 추가세율 10%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98 호 / 주간 52호

2020. 12. 23.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개인명의 주택구입과 법인명의 주택구입의 규제강화 각종 불이익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공표내용(2018년 기준) 요약과, 근로자 1인당 평균연봉 추정	2
C E O 에 세 이	'번 만큼 세금낸다'는 의식 몸에 배야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과세물품 공급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임 - 자산매입시 대가로 지급한 총금액에 대해 매입가액으로 반영함 - 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공급시는 대가 주고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임 - 자본적지출금액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과 합산하여 종전의 상각률 적용 함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 개인·법인 주택보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9 10
직 장 인 Survival	엔택트시대 재택근무의 새로운 기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7 가지 팁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 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 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 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90, 2020.05.24)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장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1677, 2020.04.20)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 투자 시 최고 12% 세액공제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코로나19에 따라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일괄조건으로 지원하는 임대 료지원금은 손금인정됨	13
세 무 정 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15 23
회 계 정 보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32
노 무 정 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3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48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공표내용(2018년 기준)요약과, 근로자 1인당 평균연봉 추정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중소기업 숫자 : 총 기업수 6,643,756개 중 99.9%인 6,638,694개(대기업은 0.07%인 5,062개)
2. 종사직원 비율 : 총근무자 20,591,641명 중 83.1%인 17,103,938명(대기업 근로자는 16.9%인 3,487,703명)
3. 중소기업 매출 : 총 5,491조 1,068억원의 48.5%인 2,662조 8,830억원임(대기업 매출은 51.5%인 2,828조 2,238억원임)
4. 직원 1인당 매출
 

중소기업 2,662조8,830억 ÷ 17,103,938명 = 1.557억 (1.5억원 내외) (편집자 계산액)	대기업 2,828조2,238억 ÷ 3,487,703명 = 8.109억원 (8.1억원 내외)
--	--
5. 직원 1인당 소득액
 

중소기업 : 인건비율 최대 약 20% 가정 : 1.55억 × 20% = 3,100만원 (편집자 추정 금액)	대기업 : 인건비율 약 15% 가정 : 8.1억원 × 15% = 1억2,150만원
	최소 10% 가정하면 8.1억원 × 10% = 8천만원(대기업 총액연봉 평균)
6. 편집자 해석
  - ① 중소기업은 인적서비스 중심 내수회사가 대부분이며, 1인당 자본, 설비금액이 낮아 1인당 매출액도 평균 1.56억원 내외로 열악함. 인당 매출액 중 인건비 비율을 최대 20%로 계산하여도 1인당 평균 연봉은 알려진대로 3천만원(1.56억원 × 20%)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 ② 대기업은 물적자본과 기술지향 및 수출회사가 대부분이므로 1인당 자본, 설비 투자비율과 생산성이 높아 인당 매출액은 평균 8.1억원에 이릅니다. 1인당 매출액 중 인건비 점유비율을 최소 10%로 계산하여도, 근로자 1인당 평균연봉은 8천만원 내외임을 알 수 있음.

## '번 만큼 세금낸다'는 의식 몸에 배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한국에서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면 손해다. 세금만 에누리없이 내야하기 때문이다. 월급쟁이를 제외하고, 사실 한국에서 정직하게 수입을 보고하고 끝이곧대로 세금 내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Fila 코리아를 시작한 92년부터 필자는 116억원을 벌어서 그 중 50억원 이상 세금을 냈다. 회사는 1200억원을 순이익으로 벌은 후 국세로 705억원을 냈다. 덕분에 국세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필자와 필자가 경영하는 회사는 바보와 바보기업인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떠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 일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떳떳하게 떠들수 있는” 그 자체에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에는 필자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 무수히 있다. 하지만 그걸 자신있게 자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세금 정상적으로 내고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한국이다. 법의 허점과 틈을 비집고 전문가를 동원하여 탈세하는 것을 절세라고 주장한다. “절”묘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게 “절”세인 모양이다. 100억원 정도의 증여세만 물고도 “적법(?)하게” 몇조원의 자산을 자식에게 양도하는 재벌이 엄존하는 한국이다. 기업의 자산을 구입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그것으로 자기 개인 세금을 내고 검은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재벌오너 아버지와 아들도 있다. 세무행정을 붕괴시키고 입법까지 방해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실정이다. 절세를 넘어 탈세까지 경계가 오락거린다.

그런 재벌 오너 밑에 기업이 온전하기 힘들다. 임원이 그렇고 직원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민 모두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변칙, 반칙, 탈법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국민의 탄식, 절망, 포기가 번지는 한국이다. 억울함과 불만이 쌓이고 갈등의 긴장이 존재하는 걸 느낀다. 권한도 없이 책임만 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책임져야 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일반사람들이 올바르게 널리 공감대를 형성한 의식이 바로 건전한 상식이다. 마땅한 기본이 경시되고 건전한 상식이 무시되고있다. 이래가지고는 결코 미래가 없다. 기본을 지키고 건전한 상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존중된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함을 뜻한다.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너와 내가 모두 공존할 수 있다. 그것이 선진기업과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군인은 국토방위의 일에 전념하는 일. 학자는 연구하고 교수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 법률가는 법을 수호하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일에 매진하는 것. 주주는 이윤을 추구하고 경영자는 경영에 몰두하는 일 등등이 순리이며 상식이다.

일부 군인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해 왔고 일부 검사들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왔던 역사. 학자, 교수가 걸핏하면 정치가와 권력의 앞잡이로 변신하는 것. 안다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실천과 조정은 다르다는 상식을 외면하는 일. 오너세습으로 전문경영을 짓밟는 "봉건경영"이 엄존하는 기업풍토. 이런 구습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룩하려는 건전한 의지가 바로 건전한 상식일 것이다.

돈벌어서 세금 잘내는 것이 결코 바보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지금 투명성을 강요받고 있다. 세계가 바라보고 있다.



### 과세물품 공급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임

**Q** 과세사업자가 면세(토지 등)사업에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A** 과세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자산매입시 대가로 지급한 총금액에 대해 매입가액으로 반영함

**Q** 하도급업체 A업체로부터 설비를 당사에서 매입 후, C업체에 매각을 하려고합니다. A업체로부터 설비 중 추가로 손실비용(A업체가 생산을 위한 투자비용)까지 포함시켜 매입하는데, 이 손실비용은 매입시 전체를 유형자산 매입으로 잡고, C에 매각시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할지 아니면 유형자산 매입 + 잡손실(C업체 투자비용으로 자산회수가 안됨)로 처리하는 게 맞을지요?

**A** A업체로부터 손실비용포함한 매입전체금액을 자산 매입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자산을 매각시 장부가보다 저가로 매각시 처분손실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공급시는 대가 주고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임

**Q** 제3조  
2.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선급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말일에 익월귀속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정상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사업자의 자금에 문제가 생겨 세금계산서 발행 후 1개월이내에 입금이 안될 경우

1.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대가의 일부를 받았을 때 해당금액(일부)에 한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공급가액(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굳이 정상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자본적지출금액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과 합산하여 종전의 상각률 적용함

Q

내용연수가 종료된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에 따르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상각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자산종류: 기계장치

취득일자: 2000-01-01

내용연수: 10년

취득가액: 10,000,000원

잔존가액: 1,000원

상기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2020년 8월 5,000,000원의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금액을 더한 뒤 상각률을 곱해  $(10,000,000 + 5,000,000) * 0.1 = 1,500,000$ 원을 연상각비로 하여 잔존가액이 1,000원이 될때까지 상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각률을 곱해  $5,000,000 * 0.1 = 500,000$ 원을 연상각비로 하여 잔존가액이 1,000원이 될때까지 상각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에 자본적지출금액을 합산하고 종전의 상각률로 계산한 금액이 감가상각범위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는 차후 과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액 산출은 물론 소득·법인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며 국세청의 자동검증자료가 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손금인정에 증빙자료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계산서가 소득·법인세 등 과세자료의 기초자료가 된다. 물론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매입자료는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업자와는 다르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를 다음 거래단계에 전가시키는 법적장치이다. 반면에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증빙서류이다.

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로서의 기능, 매입세액공제 증빙의 기능은 물론 소득·법인세법의 근거과세자료로서 기능, 각종 비용인정 증빙으로서의 기능과 각종 공제증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송장, 청구서, 대금영수증 등의 부수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가 이루어져야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단,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거래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면서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하는 때를 재



화 등의 공급시기로 본다.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계속적인 거래처인 경우 발급편의를 위해 거래처별로 1억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그냥 계산서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로서 매출부가세가 없다. 결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하며, 매년 2월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규정은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누구라도(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의3 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매년 2월 10일) 제출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에 따라 미제출액×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3. 결정 · 경정시 공제받는 가산세율, 공급가액 1% → 0.5%
4.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제외
5. 신탁재산 관련 재화 · 용역공급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시행시기 2022년부터 1월 1일)
6. 신탁재산 체납시,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으로만 체납처분
7.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등 명확화



### 연말정산 대비 금융상품

상품	대상	최대 공제금액	절세 혜택
개인형 IRP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	(연금저축 합산) 700만원	세액공제(16.5% 또는 13.2%)
연금저축	국내 거주자	400만원	세액공제(16.5% 또는 13.2%)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가구주	24개월	소득공제의 40%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자	500만원	소득공제(6~42%)



## 개인 ·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0%	0.60%	3.00%	0.60%	1.20%	6.00%
3억~6억원	0.70%	0.80%		0.90%	1.60%	
6억~12억원	1.00%	1.20%		1.30%	2.20%	
12억~50억원	1.40%	1.60%		1.80%	3.60%	
50억~94억원	2.00%	2.20%		2.50%	5.00%	
94억원 초과	2.70%	3.00%		3.20%	6.00%	



##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부수법안

개정법 이름	법안 내용
부가세법	자영업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소득세법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42%에서 45%로 인상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과산화폐 연 250만원을 초과 소득 20% 과세
종부세법	납세의무자 수탁자 → 위탁자 변경, 신탁에 부동산 맡겨도 합산부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도 장기보유공제 최대 80% 적용
증권거래세법	2023년 금융투자세 신설 맞춰 증권거래세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



## 언택트시대 재택근무의 새로운 기준: 생산성 향상을 위한 7 가지 팁

### 1- 업무시간 경계 정의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실제로 일할 시간이다.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시간을 넘겨 일하고 수면을 희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 시간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자.

### 2 - 원격 사무실 설정을 올바르게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집에서 작업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할당해야 한다. 업무 공간과 나머지 집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만들어 작업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 3 - 의사 소통 습관

이메일, 카톡 등 의사 소통으로 정보 흐름을 돕고 모호성을 줄이며 조직 목표와의 일치를 우선시하자. 팀 리더와 팀 구성원은 모든 사람이 진행 상황, 성공 및 목표에 대해 동일한 페이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목표에 기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4 - 일상 유지

내 자신이 언제 생산적인지 파악하고 그 시간에 맞춰 업무를 계획하도록 하자. 하루 중 그 시간에 큰 작업을 수행할 때 가장 생산적인 자아가 될 수 있다.

### 5 - 사회적 상호 작용

장기간 격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우울증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면역 체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팀원들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사교화하자.

### 6 - 활동적 유지

한 번에 30분 이상 앉아 있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자. 작업 생산성에 올리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가볍게 앞뒤로 걸어가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간단한 맨몸운동을 하는 것이다.

### 7 - 자기 관리

출근 준비시간 및 출퇴근 시간 등에서 절약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하다. 값진 자유시간에 새로운 취미나 언어, 업무 기술을 배우는 것에 투자하자.

# 최 신 판 례 예 규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90, 2020.05.24

## ■ 질 의

-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각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하 "반대주주"라 함)로부터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금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의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을 고려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준법령부가-120, 2020.05.22

## ■ 질 의

- 자문대상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구청에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가 회원에게 1:1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Personal Training, 이하 "PT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함
-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대가가 책정되는 반면, PT용역은 횟수에 따라 대가가 책정되며 대가의 60% 정도가 체육지도자의 인건비로 지출됨

## 질의

-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1:1 개인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코로나19에 따라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일괄조건으로 지원하는 임대료지원금은 손금인정됨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1312, 2020.05.26

#### ■ 질 의

- 질의법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라 모든 대리점주에게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 할 계획이며,
  - 본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중인 대리점에는 임대료 인하, 본사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임차중인 대리점에는 임대료 지원, 모든 대리점에 인건비 및 인력을 지원 할 예정임
  - 임대료 지원금액은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의 약00%, 인건비 지원 규모는 대구지역과 기타지역을 차등하여 적용(같은 지역은 동을 적용)

#### 질의내용

- 본사가 모든 대리점에 임대료·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접대비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본사인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를 돕기 위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총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1677, 2020.04.20

#### ■ 질 의

- 질의법인은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를 문의

#### 질의내용

- 소속회원사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입회비, 연회비)가 손금산입되는 회비에 해당하는지

#### ■ 회 신

귀 질의의 입회비, 연회비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총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내년부터 탄소저감기술 투자 시 최고 12% 세액공제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통합 투자세액공제 내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여러 법으로 나뉜 기업 시설투자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를 하나로 합친 제도로 복잡한 기준을 정리해 이용하기 쉽게 개편됐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해준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시설투자보다 우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에는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향후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도 새로 포함된다.

신성장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12%와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탄소 저감 기술, 포집 기술, 탄소 배출 감축 등 그린 뉴딜과도 연계되는 내용에 대해 우대 공제를 적용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한 신성장 기술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성양식 개선한 K-IFRS 기준서… 연말부터 제공

회계기준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말부터 구성양식을 개선한 K-IFRS 기준서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서 형식의 변경이며, 내용 변화는 없다.

주요 개선내용은 구성항목 구분, 결론도출근거 성격 명확화 등이다. 구성항목 영역에서는 기준서를 ▲본문 ▲적용 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결론도출근거'와 'K-IFRS 결론도출근거'를 구분했다.

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제정주체(IASB 등)가 회계기준 제정절차 등을 자세히 서술했으며, K-IFRS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도록 원문을 번역해 제공한다.

K-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추가한 문단에 대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기준위원회 의결 표시 수정, 저작권 번역 오류 수정했다.

개선내용은 기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내년부터 '애견숍·미용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포함

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키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발급의무 위반 시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와 현금 거래 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두 배의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30%)을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국세청, 2020. 12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업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 두발 미용업2),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1)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2)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동물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 (96112)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 각종 겹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겹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교복·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신발 소매업 (47430)	•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1)	•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독서실 운영업 (90212)	•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대학·학교 기숙사는 제외)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47511)	•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 1. 1.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소비자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예)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 \* 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09년) 68.7 → ('19년) 118.6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가입 시 자동 등록)	<p>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할 경우 체크박스를 통해 자동등록 가능</p> <p>*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p> <p>** '20년 12월 이전 홈택스 가입자 중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미등록한 경우 별도 등록 필요</p>

홈택스 (가입 후 별도 등록)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자동등록시스템 (☎126)	① 홈택스 > ① 현금영수증 > ① 한국어 > ②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붙임 1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10. 4. 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 7. 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 1. 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 6. 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 7. 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 7. 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 1. 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 1. 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1. 1. 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10. 4. 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4. 7. 1.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 → 10만 원)
'14. 7.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 → 100만 원, 연간 1,500만 원 → 500만 원)
'16. 1.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 → 50만 원, 연간 500만 원 → 200만 원)
'19. 1. 1.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 12. 31.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 붙임 2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li> <li>· 법인사업자</li> <li>·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li> <li>* 수입금액 기준 없음</li> <li>*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li> </ul>
발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li> <li>-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li> </ul>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li> </ul> </li> <li>-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li> <li>-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li> <li>·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li> <li>* 7일 이내 발급시 50% 감경</li> </ul>
기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맹 시</li> <li>·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li> <li>·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li> <li>·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li> </ul>

### 붙임 3 -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



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 ☞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7>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국세청, 2020. 12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 2020년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20. 11. 12.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국세정보위원회는 명단공개 대상자 중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채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을 공개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 (연도별 공개인원) '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 '19년 1명
-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채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2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채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액·상습채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채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채납자로,
    - \* ('04) 기간 2년·금액 10억 이상 → ('10) 2년·7억 → ('12) 1년·5억 → ('16) 1년·3억 → ('17) 1년·2억
  - 공개 항목은 채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채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채납 요지이며,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11.12.)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6,965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 ('19) 7,702명, 59,995억 원 → ('20) 7,624명, 55,178억 원
  - 분납 등으로 채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인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하였습니다.
    - \* 공개제외 659명(개인 426명, 법인 233개 업체)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총 채납액은 4조 8,203억 원입니다.
  - 개인의 최고 채납액은 1,176억 원(이성록, 44세), 법인의 최고 채납액은 260억 원((주)하원제약, 제조업)입니다.
  -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127명이 증가하였으나, 채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채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채납액은 5,8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 ('19) 42명, 8,939억 원 → ('20) 28명(14명 ↓), 6,946억 원(1,993억 원 ↓)  
\*\* ('19) 6,838명, 54,073억 원 → ('20) 6,965명(127명 ↑), 48,203억 원(5,870억 원 ↓)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6,965	48,203	4,633	33,417	2,332	14,786
비율	100.0	100.0	66.5	69.3	33.5	30.7

-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1조 6,114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9%, 32.5%를 차지합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6,965	4,732	1,485	601	75	44	28
비율	100.0	67.9	21.4	8.6	1.1	0.6	0.4
체납액	48,203	16,114	10,020	9,327	2,774	3,021	6,947
비율	100.0	32.5	20.2	18.8	5.6	6.1	16.8

-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명단공개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입체 지도로 시각화하여 공개하며,
  - 국세청·행정안전부(위택스)·관세청 누리집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여 한 곳만 방문하여도 국세, 지방세 및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진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진수·발급금액, 의무 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받



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입니다.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4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명단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12.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 (기수시기 : '12. 7. 1.~'16. 6.30.) 5억 원
    - (기수시기 : '16. 7. 1.~'16.12.31.) 3억 원
    - (기수시기 : '17. 1. 1.~ 현재) 2억 원
  -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 올해 공개대상은 '19. 7. 1.부터 '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으로, 작년에 비해 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공개대상이 감소한 것은, 공개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대상 기간을 조정\*(1년 → 6개월)하였기 때문입니다.
  - \* (작년까지 : 1년) 전년도(공개연도 기준) 하반기~공개연도 상반기 → (올해 : 6개월) 전년도 하반기 → (내년 이후 : 1년) 전년도 전체
-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 \* 포탈세액 합계(35명) : 681억 원, 최고 포탈세액 : 199억 원
  -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 (공개 제외 대상) ①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불성실 기부금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 (공개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 불이행 내역 등
- (공개제외)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조세포탈법

####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12. 7. 1. 이후 「조세법 처벌법」 등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 (기수시기 : '12. 7. 1.~'16. 6.30.) 5억 원
    - (기수시기 : '16. 7. 1.~'16.12.31.) 3억 원
    - (기수시기 : '17. 1. 1.~ 현재) 2억 원
- (공개항목)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공개제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항목)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 금액 등
- (공개제외)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붙임 2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 ◇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40~50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음
- ◇ 법인의 경우 주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 구간은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업·서비스업이 가장 많음.

□ 개인 명단공개자: 4,633명

-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59명(59.5%)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72억 원(60.0%)입니다.

###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원	4,633	417	1,207	1,552	1,021	310	126
비율	100.0	9.0	26.0	33.5	22.0	6.7	2.8
체납액	33,417	3,138	9,633	10,439	7,212	2,104	891
비율	100.0	9.4	28.8	31.2	21.6	6.3	2.7

- 개인 명단공개자 중 2,626명(56.7%)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621억 원(61.8%)입니다.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4,633	117	1,470	272	211	100	159	121	270
비율	100.0	2.5	31.7	5.8	4.5	2.2	3.4	2.6	5.8
체납액	33,417	599	11,314	1,488	1,283	683	897	1,200	1,740
비율	100.0	1.8	33.9	4.5	3.8	2.0	2.7	3.6	5.2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832	21	88	324	106	137	60	221	124
비율	18.0	0.5	1.9	7.0	2.3	3.0	1.3	4.8	2.7
체납액	7,340	123	470	1,967	653	1,080	764	1,198	618
비율	22.0	0.4	1.4	5.9	2.0	3.2	2.3	3.5	1.8

○ 개인 명단공개자 중 3,087명(66.6%)이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563억 원(31.6%)입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4,633	3,087	1,038	404	56	29	19
비율	100.0	66.6	22.4	8.7	1.3	0.6	0.4
체납액	33,417	10,563	6,997	6,183	2,053	2,024	5,597
비율	100.0	31.6	20.9	18.5	6.1	6.1	16.8

□ 법인 명단공개자: 2,332개 업체

○ 법인 명단공개자 중 1,456개 업체(62.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704억 원(65.6%)입니다.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2,332	41	799	108	79	43	66	35	101
비율	100.0	1.8	34.3	4.7	3.4	1.8	2.8	1.5	4.3
체납액	14,786	203	4,365	807	393	261	375	161	547
비율	100.0	1.4	29.5	5.5	2.7	1.8	2.5	1.1	3.7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514	16	79	143	49	64	36	96	63
비율	22.1	0.7	3.4	6.1	2.1	2.7	1.5	4.1	2.7
체납액	4,334	83	517	1,005	294	354	197	605	285
비율	29.3	0.6	3.5	6.8	2.0	2.4	1.3	4.1	1.8

- 법인 명단공개자 중 1,645개 업체(70.6%)가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550억 원(37.5%)입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2,332	1,645	447	197	19	15	9
비율	100.0	70.6	19.2	8.4	0.8	0.6	0.4
체납액	14,786	5,550	3,023	3,144	721	997	1,351
비율	100.0	37.5	20.4	21.3	4.9	6.7	9.2

- 법인 명단공개자 중 942개 업체(40.4%)의 주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535억원(44.2%)입니다.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도소매	서비스	건설	제조	부동산	기타
인원	2,332	434	508	464	481	331	114
비율	100.0	18.6	21.8	19.9	20.6	14.2	4.9
체납액	14,786	3,944	2,591	2,732	2,594	2,309	616
비율	100.0	26.7	17.5	18.5	17.5	15.6	4.2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 금융감독원, 2020. 12

## 1 개 요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투명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과 감사인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
  -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

## 2 그 동안의 노력

- 코로나19의 본격화(2월) 이후 감독당국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리스 회계기준 개정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및 감사의 부담을 완화
  - 또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감독당국의 입장 안내

### < 코로나19 관련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의 주요 대응내용 >

- ①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허용 및 행정제재 면제('20.3월)
  - \* 해외 종속회사 등의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금감원 심사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기한 연장 및 행정제재를 면제†
  -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고,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 허용
- ②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20.4월)
  -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③ K-IFRS 제1116호(리스) 회계기준 개정('20.7월)
  - \* 코로나19로 인한 리스로 할인·면제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리스부채의 재계산 없이 할인·면제 금액을 리스부채에서 단순 차감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허용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20.9월)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 † 개별 : 2조원 이상( '19년), 5천억원~2조원('20년), 1천억원~5천억원( '22년), 1천억원 미만('23년) 연결 : 2조원 이상( '22년) → 5천억원~2조원('23년) → 5천억원 미만('24년)
- ⑤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 유예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추진('20.11월)
  - \* '20년부터 소규모 비외감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에 편입되도록 연결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획득이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 추진
- ⑥ 감사인 선임·지정 등 관련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20.4월, 8월, 11월)
  - \* 유한회사 등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설명회 개최('20.4월),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20.8월), K-IFRS 제·개정 내용을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설명회 개최('20.11월)

### 3 코로나19관련 향후 감독방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 예정

- ① (회계감사기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한공회와 함께 안내할 예정(12월)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등 제시
  - 외부감사법 개정('18.11.1.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



련하여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존재

⇒ 초기 제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 예정('21.1분기)

-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 존재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해외자회사 평가 등의 결산 수정사항을 기계적으로 중요 취약점으로 분류할 우려

⇒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제공할 예정(12월)

### ③ (외부감사제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의 탄력적 운용

- 코로나19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 우려

⇒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할 예정

### ④ (회계현안 설명회 등)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 회계법인 등과 회계감독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 19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할 필요

⇒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

\* 회계현안설명회(12.23일, 감사인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 지방순회설명회('21.1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

##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한공회, 회계기준원 등)과 협력하여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실무가이드 등은 '20년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대책 발표

- 고용노동부, 2020. 12

-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 \* 현(現)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①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②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③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 포함
  -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
    -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실시
      - \*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 대상 지원
    -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



## ②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1년)

-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 \*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 \* ▲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 지원(질병청), ▲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고용부), ▲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 등 마스크 지급(공공기관) 등

## ③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1년)

-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 \* (노·사·전문가TF, '20.10월~'21.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개편 및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 논의
-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과약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
-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 ('20.7월) 방문판매·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 ▶ ('21.7월)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

## ④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 \*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산업·행안 등)
  - ▲ 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국토·산업·지자체 등, ~'20.12월)
-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 \* ▲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

전감독 실시('21.2월~),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 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21년 상),

#### 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 ('20년: 50~299인 시설) 795명 지원 → ('21년: 5~49인 시설) 3,127명 지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 ⑥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1.1월)
-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1년)

#### ⑦ 이륜차 기사 보호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년)

-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21년)
-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마련 등 추진
-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12.21.) 예정

#### ⑧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년)

\* ▲업소용 既사용 제한('19.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 추진

\* ①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②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자동화, ③화재, 사고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 ⑧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1년)

-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제도화
-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히고,
-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

### I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부각
  - \* (택배)월242백만개('19.7월) → 292백만개('20.7월, 20%↑)로 물량 증가
  - (공공의료)중증환자 치료병상·병원 급증, (청소)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등
- 그럼에도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 “공공의료 인력 부족”(10.27. 경사노위), 감염우려 등으로 돌봄서비스 중단, 환자·가족의 부담 증가(‘20.4월, 실태조사) 등
- 이에,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와 성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
  - \* (미국) 필수노동자(essential employee) 위험수당 등 「Heros Act」 제정 추진,  
(美. 플로리다州 등) 필수노동자 범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서울 성동구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

## II 필수업무 현황 및 보호 필요성

- ① 국민 생명·안전의 보호와 사회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서
- ②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나, 업무량 변동에 따른 과로 및 고용불안정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에 대한 대책 마련

### 1 “필수업무”의 범위

-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
-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 ①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 ②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주로 포함
  - ③ 아울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등의 업무도 포함

### 2 보호·지원 필요성

#### ①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 (감염) 의료, 돌봄, 대중교통 운행 등은 대면·접촉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
  - 아울러, 콜센터, 물류센터 등 좁은 공간에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간 집단감염의 가능성 상존





- (사고) 이륜차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물량단위 계약, 취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직종 다수

## ②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 (과로) 의료분야 종사자,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
  - \* ▲ 의료인력 장시간 격무 등 과로·정신적 고갈 상태(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6월), ▲ 택배기사 일평균 12.1시간 작업, 주6일 배송 보편화 등
- (근로조건) 돌봄 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은 고령·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으로 저임금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 경험
  - \* ▲ 재가돌봄 종사자 월평균 소득 100~140만원 수준
  - ▲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교실 축소 등으로 소득 절벽
- 택배·배달·대리기사 등은 수수료 감소, 각종 비용부담 등으로 소득 불안정 지속
  - \* ▲ 택배기사 수수료 감소('02년 12백원 → '19년 8백원),
  - ▲ 대리기사 이중 보험료 부담(중개업체 단체보험-기사 개인보험) 등

## ③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 (노동관계법의 보호) 택배·배달·대리기사, 돌봄 종사자 등의 상당수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고 및 프리랜서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
-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률이 낮아 실업·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

### III

## 총괄 대책

- ❖ ①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강화 ②건강보호 ③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④사회안전망 확대 등 ⇒ 중단없는 필수 업무 수행

### 1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강화

- (방역점검 강화) 코로나19 감염 등에 취약한 필수분야(물류센터, 콜센터 등) 등에 대한 방역 조치 지도·점검 강화
  - \* 3월 콜센터 163명 확진, 5월 물류센터 156명 확진 등 취약업종 집단감염 지속
- (관계부처 합동 관리)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 \*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산업·행안 등)
  - ▲ 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국토·산업·지자체 등, ~'20.12월)

- (단계별 점검) 주요 사업장 집단감염 사례 등에 기반, 감염 취약사업장DB 구축 및 거리두기 단계별 선제적 감염관리 실시
- (방역물품 지원)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 열화상카메라, 칸막이, 소독기 등 방역물품 지원(소요비용의 70%)
-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용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한 국가(공공)지원 강화
  - \* ▲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21년, 38억원),
  - ▲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등 수행 근로자 대상 마스크 등 지급

## 2 건강보호 강화

- (위생시설 확충) 필수분야 사업장에 휴게·샤워시설 등 종사자 위생시설 설치 지원\*(시설비용의 70%,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 \* 대상직종을 택배·배달, 환경미화원 등으로 확대, 우선 지원('20.10월~)
- (건강진단 확대)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진단 실시 지원('21년)
  - \* ▲ (환경미화원) 디젤매연, 결정형유리규산 등 장기노출로 폐질환 우려
  - ▲ (택배·배달) 과로·야간업무 등 뇌심혈관계 질환 우려 등 (택배기사 10명,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 ~'20.10월)
-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을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하는 등 제도화 추진('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 필수노동자의 과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 등을 심층 진단하고, 사업장 조사,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체계 강화
  - \* ▲ 과로사 고위험군 초음파 진단, 주기적 진찰 등 초고위험군 관리
  - ▲ 근골격계 유해요인 사업장 조사, 보호장비 지원, ▲ 건강관리센터 상담

## 3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 (인력확충 등) 코로나19로 인한 필수업무 수요변화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 종사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 ▲ (버스 등)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지원기간 확대 180→240일, '20년),
  - ▲ (사회복지시설 등) 신종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 (52시간 적용 사업장)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등
- (처우개선 지원)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



으로 한시적 생계지원 실시

\* 재가돌봄 종사자 등 최대 9만명(1인당 50만원 일시 지원)

#### 4 사회안전망 확대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 적용,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제공(「고용보험법」 개정, '20.12월)
  - \*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대한 노·사 간담회 실시('20.9~10월, 12회),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 및 적용방안 등 논의
  -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특고종사자, 사업주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료(80%) 지원('21년~)
  - 특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20.12월)
    - 임금근로자 중심 제도를 특고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 추진
    - \* 취업자의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및 소득정보 공유 확대 방안 포함
-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적용·징수 등 운영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산재보험법」 개정, '21년)
  - \* 관련 「노·사·전문가TF」 구성·운영 중('20.10월~'21.초)
  - 특고 전속성 개편,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 논의
  -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 가능한 특고 직종(간병인 등)을 지속 발굴·적용 확대('20.7월 적용 직종 확대, 9 → 14개)
  - 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고종사자 적용제외를 허용하는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산재보험법」 개정, '20.12월)

## IV

### 분야별 맞춤형 대책

#### 1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 ❶ (간호인력 확충) 간호인력 전문성 제고, 경력개발을 위해, 신규간호사 등 교육·관리를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대상 확대
  - \* ('20년)국·공립병원에 259명 지원(인건비) → ('21년)민간의료기관 확대 검토
  - (긴급충원) 현장 의료인력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15개 공공병원에 간호인력(557명) 긴급충원('20.9월)

\* 음압병상 등 확진자 치료 전담 및 선별진료소 간호인력 등

- ② (종사자 보호) 병원, 선별진료소 등 의료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지원('20.12월~, 951만개)
- \* 레벨D 보호복 951만개(現 비축량 611만개, 비축 예정 340만개, '20.11.30기준)
  - (보호기준 마련) 코로나19 입원환자 등의 무리한 요구, 인권침해 등에 대한 종사자 보호기준 마련('20.10월~)
    -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로 명시
    -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개정('20.10월, 복지부·병원협회 공동)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문인력 대상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매뉴얼」 마련('21년)
  - (교육 등)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기관장 조치사항 이행 강조('20.10월), 간호인력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21년)
    - \* 인권침해예방·대응 심화교육과정(대응절차·사례공유·토론 등) 신설
  - (방역소독종사자 보호) 감염위험 및 유해소독제 노출이 잦은 감염병 방역소독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기준 마련·확산
    - \* ▲(민간 방역인력) 정부, 자치단체 등 위탁계약 시 방역인력 보호(장비·절차 등) 기준 안내
    - ▲(공공 방역기동반) 전국 지자체에 지침 안내
    - (방역 전문성 강화) 종사자 안전보장 및 방역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역기동반 안전관리 지침 마련('21년)
- ③ (처우개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파견된 민간 파견인력\*에 대한 위험수당(일 5만원), 교육수당(15만원) 등 지급
- \* 간호사 1,779명, 의사 69명 등 민간 파견인력 2,180명 지원('20.11월 기준)

## ② 돌봄 서비스 분야 종사자

- ① (인력 확충)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모든 돌봄 시설(민간 포함)에 방역수칙, 환기 등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 지정·배치
- \* 주기적 교육 및 모니터링, 시설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방역 대응 사례 및 돌봄 대응 사례 등 정보 공유
  - (고용지원) 중고령층 돌봄 종사자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20.12월)
    - \* 사회복지·상담 등 4개 직무 대상 지원요건 완화(무기계약→6개월 이상)
  -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교대근무인력 추가 확보\* 및 대체인력(휴가·교육 등) 채용 지원
    - \* ('20년: 50~299인 시설) 795명 지원 → ('21년: 5~49인 시설) 3,127명 지원
    - 종사자의 감염이나 돌봄 수요 급증 등 긴급소요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 \* (기존) 휴가·교육·병가·경조사 등 → (확대) 종사자의 감염, 접촉에 의한 격리 등



- (재가돌봄 종사자)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종사자 자격요건을 연계\*, 종사자의 업무 폭을 넓히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21년)
  - \* 2유사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교육이수 의무를 감면 등
- (보육교사)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 등 위한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고용안정 지원\*
  -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 ② (종사자 보호)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5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기준으로, 종류별·기능·대상별 방역대응 매뉴얼 마련
  - \* 돌봄시설 종류별(생활시설, 이용시설), 기능별(필수 돌봄시설, 활동지원, 여가복지 시설 등), 대상별(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요양보호사) 권리침해 대응, 건강관리, 정신상담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21년 3개소)
  - 전국 요양시설 대상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 체불 등 집중점검 실시('21.上)
- (노인돌봄 종사자) 종사자 안전관리,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매뉴얼 배포 및 종사자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 등 추진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안전관리 실무매뉴얼」안내,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종사자 소진예방 특강 등 실시('20.12월~)
  - 성희롱, 폭언·폭행, 감염 예방, 대응 등에 대한 종사자 매뉴얼(포켓북) 제작·배포('21년)
-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 위한 종사자, 사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20.12월)
  - \* (종사자) 위험 요인별 사고사례 및 예방법,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 등, (사업주) 산안법상 사업주·관리책임자 의무, 산재발생시 처리절차 등
- (보육교사) 임금 부적정 지급 근절, 심리지원, 권익침해 신고 활성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21년)
  - \* 임금 부적정 지급 신고안내 강화, 보육교사의 피해사례 확인시 해당 아동의 반 분리, 퇴소 등 행정절차 강화, 보육교사 심리건강 지원 강화
- ③ (처우개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지속 개선('21년 인상률 1.9~3.9%)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
  - \* 직무를 반영한 적정보수 가이드라인의 적용기준, 준수를 산출방식 등 제도개선('21.上)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달성방안 마련('22년)
-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서비스 단가 인상('20년 13,500원 → '21년 14,020원)
-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서비스 수요 활성화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추진
  - \* (연간 지원한도) 720 → 840시간

(정부부담비율)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미취학) 55→60%

- ④ (제도 개편) '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정규직 돌봄종사자 확충 등 공공부문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
- \* ('20년) 10개 → ('21년) 14개 → ('22년)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
  - (사회서비스원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관리체계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추진('21년~)
  - (가사근로자법)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공식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1년~)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
    - 법제정 시, 이용액 세액공제, 구매권 제도 도입 등 현장안착 추진

### ③ 운송서비스 분야 종사자

#### 여객운송 종사자

- ① (버스기사 지원) 노선버스 등 근로자 감원방지 및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훈련과정(자격취득·실무 등) 지원 등 실시
-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시, 연간 180일 범위 내 사업주 부담분(유급)의 2/3, 또는 평균임금(무급)의 1/2내 지급
  -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차고지 내 휴게·위생시설 등 설치 지원('21년, 10개 자치단체, 18개소 지원)
- ② (대리기사 부담완화)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21.1월),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대리기사에 구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1년)

#### 화물운송 종사자

- ① (유통관련 배송 종사자) 온·오프라인 유통 관련 배송업체 종사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1.上)
- (산재보험 적용 확대) 높은 재해위험을 고려, 산재법상 특고 종사자에 포함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21년)
  - (온라인유통업체 감독) 배송업무가 급증한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종사자 과로 및 안전 등 근로감독 실시('20.10월~11월)
    -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 근로·휴게시간 등 준수 지도('21년)
- ② (대형화물 안전운임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화물운송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안전운임제



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20.10월~)

- ③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택배기사를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마련·발표(11.12.)
  - (주요내용) 적정 작업시간 관리, 맞춤형 건강진단 확대 실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등(「산재보험법」 개정사항)
  - (후속대책)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 구성, 산업육성·종사자 보호방안 등 논의
    - \* 협의회 구성, 논의 의제 등 관련, 관계부처·업계·노조 등 협의('20.12월)
  - (입법추진) 산업 제도화(「생활물류법」 제정), 원청인 택배사의 택배기사에 대한 보호의무 강화(「산업안전법」 개정) 등('20년~)
    - \* ▲ (생활물류법)택배 등록제, 배달업 인증제 실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택배사의 택배기사 보호책임 강화, 건강진단 실시 등

#### 이륜차 배달 종사자

- ① (제도기반 마련) 배달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고(생활물류법 제정),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제 법제화 검토('21.上, 등록제 방안 마련)
- ② (종사자 안전보호) 배달업을 통해 교통사고 정보, 안전보건 교육영상 등 종사자별 맞춤형 위험정보 제공('21.1월)
  - ▶ (위험알림) 이륜차 사고데이터를 분석, 배달 종사자 사고다발구역(2천여 개소) 접근 시 위험알림 및 안전 정보제공
  - ▶ (교육영상 시청) 위치·권역별 300여종의 스맛 교육영상을 탑재, 배달업 구동시 기상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등 15초 가량의 교육영상 시청
- (가이드라인 마련) 노무제공 계약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0.12월)
  - \* 배달 소요시간 제한 금지, 배달원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 등
- (안전문화 확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슬로건 제작, 송출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21년)
- ③ (종사자 부담완화)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마련
  - \* 배달이륜차 보험료 연 152만원(손해율 134%, 적정손해율은 80% 수준)
- (정비) 이륜차 정비의 전문성 제고 및 배달 종사자 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 도입 검토('21년)
  - \* 견적서 및 명세서 발급,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 게시 등 의무 부여
- (보험) 이륜차보험 운영실태 모니터링, 종사자 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륜차 보험제도 합리화 지속 추진
  - \*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 보험상품 출시('20.10)

#### 4 환경미화 분야 종사자

- ① (인력확충) 생활폐기물 수거시 최소 작업 인원 확보를 위한 '3인 1조' 작업기준 준수 여부 등\* 조사 및 개선지도(~'21.3월)
  - \* 운전원1, 상차원2 등 작업인원 기준 점검, 차량 안전장치, 주간작업 원칙 등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기준 점검 등 실시
- ② (종사자 보호)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샤워실·휴게실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
  - \* ▲(환경미화원(위탁)·재활용품선별사업장) 위생시설 시설비 긴급지원('20.11월), ▲(환경미화원(직·공영))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행점검('18~'20년, 195개 자치단체)
  - (건강진단) 분진, 근골격계 부담 등 작업 특성을 고려한 직종별 건강진단 체계 마련 및 비용지원('21년)
    - \* (제도개선) 시범실시 및 도입방안 마련(~'20.12월), 의무도입 검토('21년~)
  - (생활폐기물 수거원) 수거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년)
    - \* ▲업소용 既사용 제한('19.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 (재활용품 수거원) 작업효율 개선,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적재높이를 줄인 재활용품전용 저압축차량 사용기준 마련
    - \* 일반 압축차량은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어렵게 하여 사용 금지
  - (재활용품 선별원) 선별인력 확충 지원,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한 작업부담 완화
    - \* ①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②노후장비 교체 및 선별시설 자동화, ③화재, 사고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 ③ (처우개선) 환경미화원(민간위탁)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자율점검 실시('20.10~12월)
  - \* 자율점검 결과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 및 추가점검 실시('21년)
  - (의료폐기물 수거원) 수거주기 단축\*에 따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상 인건비·유류비 추가 지원('20.12월)
    - \* 의료폐기물 보관기한 7일 →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당일 운반, 당일 소각
  - (재활용품 선별원) 플라스틱 선별지원금 인상\* 등 수거업체의 수익개선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안정성 확보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추가지급(kg당 35원→ 55원, ~'21.2월)
- ④ (수거체계 개편) 장기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재활용품 수거·재활용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책임 체계로 전환
  - \* 「폐기물관리법」 개정('21.上), 기존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22~'24)





## 5 기타 업무 종사자

### 콜센터 상담원

- ❶ (종사자 보호) 콜센터 종사자 보호 등 별도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콜센터 관계부처협의회 구성 등 콜센터 방역관리 강화
  - (지침 개정) 마스크 착용근무, 콜 증가 등 상담원 애로 해소를 위해 휴식시간 명시\*, 체크리스트 개선 등 지침 개정('20.11월~)
    - \* 휴식시간에 대한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반영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 마다 15분 휴식 등)
  - (협의회 강화) 관계부처 협의체 확대(행안부 추가)로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콜센터까지 관리범위 확대
  - (방역설비 지원)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대상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등 구입비용 지원(소요금액의 70%, 2천만원 한도)
- ❷ (근로·안전 감독)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 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1.2월~)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및 현장에서 문제제기하는 휴게시간, 휴가 미보장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 등 지도·감독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11일 (금)	12월 14일 (월)	12월 15일 (화)	12월 16일 (수)	12월 17일 (목)
미 달 러 (USD)	1086.20	1089.30	1090.80	1093.20	1092.20
일 본 엔 (JPY)	1041.97	1047.45	1048.59	1054.45	1055.83
영 국 파 운 드 (GBP)	1444.86	1451.93	1453.16	1470.41	1474.47
캐 나 다 달 러 (CAD)	852.39	854.49	854.76	860.92	857.10
홍 콩 달 러 (HKD)	140.13	140.53	140.71	141.03	140.89
위 안 화 (CNH)	166.34	166.75	167.08	167.29	167.41
유 로 화 (EUR)	1318.81	1321.97	1324.94	1328.73	1332.16
호 주 달 러 (AUD)	818.40	822.80	821.86	826.19	826.96
싱 가 폴 달 러 (SGD)	813.18	815.28	817.54	820.29	821.70
말 레이시아링기트 (MYR)	267.47	268.86	269.10	269.63	269.58